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류 연 구
(서울신학대학교)

백 승 호*
(가톨릭대학교)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

주요용어: 일-가족양립정책, 여성 근로소득, 다층모형, 조절효과, 비교연구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B00272).

* 교신저자: 백승호, 가톨릭대학교(livevil@catholic.ac.kr)

■ 투고일: 2013.1.30 ■ 수정일: 2013.3.14 ■ 게재확정일: 2013.3.25

I. 문제제기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일-가족 양립은 경제활동과 가족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가족 양립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족 돌봄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은 여성으로서, 특히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결혼,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생애 주기에 따라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임금수준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다(민현주, 2008). 이러한 점에서 자녀가 있는 근로 여성 또는 가임기 근로 여성의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는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가족 양립 가능성은 일-가족양립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은 복지국가 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응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아동빈곤율 증가, 출산율 감소, 노동시장 유연화 등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조와 젠더 역할 변화로 인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Taylor-Gooby, 2004:5),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부문이다(Esping-Andersen, 2002:66).

OECD의 일-가족양립정책 정의에 따르면 일-가족양립정책은 개인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고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OECD, 2002; 홍승아 외, 2008:24에서 재인용). 즉 사회성원으로서 노동 시장과 가족 영역에서 시장 노동과 돌봄 노동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 정책 대상은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일-가족양립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정책 구성과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반면, 영미권 국가들은 보육서비스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금급여 및 조세제도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관련 휴가정책의 적용 범위, 급여수준, 급여기간 등에서 관대한 수준을 보이면서도 아버지 할당제 등을 통해 성별 형평성을 꾀하는 반면, 일부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유급 출산·육아 휴직이 허용되지 않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김영미, 2009a).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별 일-가족 양립 정책의 차이가 여성의 일-가족 양립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정책과 개인의 일-가족 양립가능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국가별 사례연구나(OECD, 2002; 2003; 2004; 2007)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여성 고용 증감에 미치는 정책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Gustafsson, 1995; Meyers et al., 1999; Jaumatt, 2003; Castles, 2003; 김영미, 2007; 홍승아 외, 2008; 류연규, 2009; Hanau et al., 2010)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단위의 실증 분석 연구들은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고용 또는 근로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임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를 단위로 한 분석의 경우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정책과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으로 인한 일-가족 양립 가능성의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해 내기는 어렵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분석단위 자료가 아닌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이 일 또는 가족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요인의 영향력이 정책 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찾아내야 한다. 일국 차원의 정책 영향 분석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 중 주로 육아휴직급여나 기간, 또는 보육료 지원액의 종단적 변화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Mason & Khulthau, 1992; Ruhm, 1998; Rønsen, 1999; Del Boca, 2002; 김진욱, 2008; 김정호, 2012).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일부 정책 요소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를 설명할 뿐 다양한 정책 요소의 일-가족 양립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국 차원의 종단적 미시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정책 요소의 변량이 크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포착하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 요소의 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비교 연구 방법이 필요하고, 일-가족양립정책이 개인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 자료

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 연구가 가능한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일-가족 양립 영향 요인의 정책에 따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개인-가구 단위 자료를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통합할 수 있는 다층 모델(Multi-level model)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일-가족양립가능성과 정책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 단위, 국가 단위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층적·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층 구조 자료를 위계적 또는 다층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경우 2층 변수(지역 또는 국가 변수) 효과의 유의성은 과대 추정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Weber et al., 2005; 백학영, 2007에서 재인용) 지역 또는 국가변수를 포함한 미시 자료는 다층모형(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1층(개인) 자료 분석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 얻기 힘든 정교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2층(국가)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개인 단위 분석을 통해서 구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책의 영향을 과대 추정 없이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여성의 시장 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 '돌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을 선택하고 돌봄의 부담이 소득활동을 하는 데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완충' 작용 또는 '보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도 있지만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간접적 효과(조절 효과)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돌봄 부담이 소득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층 모델의 확률 계수 모형(multi-level random coefficient model) 분석이 일-가족양립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주요한 정책 대상인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가임기의 여성근로자가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하는지, 자녀양육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로서 '여성 근로소득'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성의 근로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취업 이후의 노동시장 지위와 생산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 참여 또는 취업 이후에도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생산성을 입증하지 못해 직업선택과 보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해도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에 고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의 일-가족양립가능성을 파악하려면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통해서도 여성의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Mandel & Semyonov, 2005). 이 연구의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 근로소득의 관계 분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는 '취업'을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로 파악했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진일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 이후에는 기존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 영역 일-가족양립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분석변수와 자료,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분석결과를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노동 영역에서의 일-가족양립정책의 양립 효과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의 맥락에서 정책 내용을 면밀히 고찰하고 정책 내용과 발달을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루었다(김수정, 2002; OECD, 2002; 2003; 2004; 2007; 김은지, 2003; Gornick & Meyers, 2003; 유해미, 2004; 장지연 외, 2005; 윤홍식, 2005; 2006; Lewis & Campbell, 2007; Lewis et al., 2008; 김영미, 2009a; 2009b; Mandel, 2009). 이 연구들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가족양립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육아휴직, 조세지원, 노동시간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으며, 정책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정책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정책 유형 또는 국가 유형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출산율 등을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은 근로자의 가족과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가족과 노동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과 노동 두 영역의 일-가족양립정책 효과라 함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양육을 회피하지 않도록 지원하거나¹⁾ 자녀가 있는 근로자(주로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중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일-가족 양립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유지해야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다(Esping-Andersen, 2002; Korpi 2000).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시장 영역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크게 국가간 비교 연구와 개인 단위의 실증 분석 연구, 다층 분석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간 비교 연구는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주로 여성 고용률 또는 성별임금비율 등 국가 수준의 통계치(aggregated dat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일-가족양립정책의 영향과 함께 분석하였다. 반면 여성 개인의 고용과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여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일-가족양립정책(주로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주로 전반적인 여성 고용의 증가, 노동시장 여성 근로자 지위 향상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성별 형평성 논의와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Meyers 외(1999)의 연구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 보육비세제지원, 공공보육서비스 접근성과 이용률 등으로 지수화하여 지수 점수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 연속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여성 고용지원정책을 하나의 지표로 치환하여 나타냈지만,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Jaumatt(2003), 김영미(2007), 류연규(2009)의 연구는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일-가족양립정책 요소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가족에 대한 효과의 실증 분석은 주로 '출산(율)', '돌봄 시간 배분'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Ronsen, 1999; Mason & Kuhlthau, 1992; Del Boca, 2002; Bittman, 1999; 김은지, 2008; Castles, 2003; Adserà, 2004; 류연규, 2005; 우석진, 2008; 김사현, 2009), 가족과 노동 두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아닐지라도, 일-가족양립정책이 '일-가족 갈등'과 같은 심리적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Lippe et al., 2006; 장수정 외, 2009; Stier et al., 2012).

Jaumatt(2003)의 연구에서는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 조세정책, 파트타임비율이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영미(2007)의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제외한 가족조세비율,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수준, 육아휴직기간이 여성경제활동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류연규(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서비스지출비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여성 고용과 성별임금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는 일-가족양립정책 효과 분석은 다른 영향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책과 전반적인 여성 고용 수준, 성별 임금 비율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뿐이지 정책이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나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개인의 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분석 연구들 중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 연구들은 일-가족양립정책 급여 수급 또는 서비스 이용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근로시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Gustafsson & Stafford(1992)는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미취학 연령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충분치 않더라도 보육비용이 낮으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Gelbah(2002)는 미국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공보육과 여성 고용의 강한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한편, Rønsen(1999)의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Joesch(1994)는 1988년 미국자료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여성의 고용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출산 후 2개월까지에 국한되었다고 보고했고, Edin & Gustavsson(2001)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연장이 노동시장 경력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aumatt, 2003에서 재인용). 김진욱(2008)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활용 및 기간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육아휴직 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과 가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김정호(2012)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동일 직장으로서의 복귀가 어렵고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가 고용 복귀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인 분석 단위 연구들은 정책 수급이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분석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일국 차원의 분석일 경우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의 구체적 정책 내용과 변량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 비교 연구는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책 내용과 정책 효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국가간 비교연구를 할 만한 자료와 방법론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의 수준을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일-가족양립정책은 개인의 일-가족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한다면 돌봄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 주는 역할 즉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능성을 완화시켜주거나 일 때문에 가족 돌봄을 선택하기 힘든 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이 개인의 ‘일-가족 선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일-가족 갈등 관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ettit & Hook, 2005).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분석은 다층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가족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 요인들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 중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이 일에 미치는 영향, 일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이다. 이러한 영향은 일-가족양립정책의 유형, 수준,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층모형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일-가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최근 연구가 있는데 Hanau 외(2010)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EU 15개국의 가구 분석 단위 자료(ECHP)를 이용하여 자녀 존재 여부, 자녀 연령이 고용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분석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 차이가 국가 정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다항로짓을 이용하여 먼저 가구 자료를 분석하고 자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가족양립정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일-가족양립정책 변수들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0~2세 무료 보육서비스 이용률, 11시간 30분 이상 운영하는 3~5세 보육서비스 비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세제혜택이다. 분석결과 공공보육서비스 이용률이 고용 차이를 가장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분석은 2단계에 걸쳐서 분석하긴 했지만

다층모델(Multi-level model) 분석방법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아니어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stévez-Abe & Hethey(2008)의 연구는 다층 모델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제도가 여성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6개국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호수준, 공공부문크기, 조세정책, 모성친화정책이 가구소득 대비 여성 소득 비중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의 주요 관심이 일-가족 양립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가족양립정책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정작 중요한 1층 모델의 기울기(자녀수가 여성의 가구소득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정책의 영향은 누락하고 1층 모델의 절편(여성의 가구소득 비중)에 대한 국가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어 조절효과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Pettit & Hook(2005)는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공공 보육서비스 등의 일-가족 양립정책이 자녀 수, 연령, 결혼 여부 등 개인적 특성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지에 대해 다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기간과 공공 보육서비스 정책이 가장 어린 자녀 연령과 여성 취업의 부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린 자녀 연령과 여성 취업의 부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정책이 여성 취업에 미치는 복합적 관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 취업 여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취업 이후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가족양립정책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간 비교연구와 일국 차원의 미시적 분석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 요소의 구체적 영향,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정책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모두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가간 비교 연구와 다층모델(Multi-level model)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규명해 내고자 한다.

2. 여성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가.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 근로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책과 여성의 고용 지속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소득(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만 분석되었다(Mandel & Semyonov, 2005; Misra et al., 2010; Estévez-Abe & Hethey, 2008).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도 일부 일-가족양립정책 또는 전반적인 복지정책 지수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성별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가족양립정책의 구체적 내용별로 여성 근로소득(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Mandel & Semyonov(2005)는 복지국가정책지수(Welfare State Intervention Index: WSII)가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WSII는 출산휴가급여기간(출산휴가기간*소득대체율), 미취학아동보육서비스이용률, 공공사회서비스 고용비율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종합지수로서, WSII는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출산휴가급여기간은 임금의 성별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이용률도 임금의 성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Misra 외(2007)의 연구는 정책 레짐별 자녀돌봄이 여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프랑스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자녀 돌봄이 여성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이 발달할수록 자녀 돌봄으로 인한 소득 페널티가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가족양립정책의 영향이 자녀로 인한 소득 페널티를 낮추는지는 분석되지 않았다. Estévez-Abe & Hethey(2008)는 공보육서비스, 공공부문 규모, 조세제도, 고용보호, 임금불평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가구소득 중 여성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중 일-가족양립정책은 공보육서비스 뿐이었으며, 이 정책의 영향은 여성 소득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sra 외(2010)의 연구는 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등이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미치는 임금 페널티를 국가별로 분석하였는데,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으면 자녀의 임금 페널티가 낮고, 육아휴직 기간이 긴 국가는 자녀의 임금 페널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 소득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 여성 근로소득의 영향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여성 고용, 여성 근로시간, 여성 고용 지속성 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해야 한다.

위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 영역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대체로 여성 고용 또는 임금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Gustafsson & Stafford, 1992; Gelbah, 2002; Jaumatt, 2003; 류연구, 2009),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정책의 여성 고용 또는 임금비율에 대한 영향은 복잡적이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여성 고용 또는 성별 임금비율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Joesh, 1994; Rønsen, 1999; 김영미, 2007; 류연구, 2009), 다른 연구에서는 휴가기간 특히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을 약화시키고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Rhum, 1998; Edin & Gustavsson, 2001; Neyer, 2003; Pettit & Hook, 2005; 김진욱, 2008; 김정호, 2012).

한편 파트타임 고용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트타임 근로는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자녀를 돌보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Jaumatt, 2003; Stier et al., 2012),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인식이나 보상 수준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가 오히려 여성의 근로소득을 낮출 수도 있다. McGinnity & McManus(2007)에 의하면 파트타임 근로자의 인적자본 특성, 업무특성,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 임금은 전일제 근로 임금에 비해 매우 낮으며, 파트타임 근로가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지만, 여성의 근로소득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해 볼 때, 여성의 근로소득에도 보육서비스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과 파트타임 고용은 정책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인 보육서비스 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 등의 정책 요소로 구분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 여성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인적자본 이론에 의하면 여성의 저소득은 성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남녀간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합리적 결과임을 주장한다(Becker, 1985; 여지영, 2003에서 재인용). 생산성은 개인의 교육, 훈련 등의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여성의 근로소득은 여성의 교육수준, 근로경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여지영, 2003).

연령은 직접적인 인적자본 변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을 근로 경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도 한다(Misra et al., 2010). 대체적으로 연령을 근로경력의 대리변수로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과 소득이 선형관계이기 보다는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를 주장하기도 한다(이병희·정재호, 2002).

일반적인 가구 또는 개인 소득 결정요인과는 달리 여성의 소득 결정요인에서 중요한 요인은 가족과 관계된 특성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소득자라기보다는 2차 생계부양자라고 간주할 때 결혼 여부, 돌봄이 필요한 자녀 수, 다른 가구원의 소득 등은 여성의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사회가 여성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일수록, 돌봄이 필요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클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지영, 2003; 김수정, 2007; 민현주, 2008; 김은하, 2009; 박현순·나동석, 2009). 그러나 이러한 가구의 특성들은 구성원이 속한 사회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 또는 완충효과(돌봄이 필요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자녀 양육과 근로소득의 부적 관계가 일-가족양립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하고자 한다.²⁾

²⁾ 여성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노동 수요측의 요인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경향이 강하여 열악한 노동시장의 지위가 여성 근로소득을 낮춘다고 보고한다(Crompton, 1995; 이영자, 2004 외 다수). 따라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할 때 여성 근로자의 직업지위 또는 근로시간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해야 하지만, 이

Ⅲ. 분석변수, 분석자료, 분석방법

1. 분석변수

일-가족양립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25~45세 여성 근로자로 한정한다. 연구 대상을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을 25~45세로 한정하는 이유는 25~45세 여성이 어린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아동 돌봄의 부담을 가장 크게 느껴 일-가족양립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며(Stier et al., 2012; Misra et al., 2010), 근로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 연구의 주요한 정책변수인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분석 대상의 근로소득이다. 여성 근로자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거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 참여 시간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존재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일-가족 양립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은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높여 여성의 근로소득 증감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로그 근로소득(logged earnings)을 종속변수로 한다. 로그 근로소득은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독립변수 단위당 변화량을 백분율로 치환하여 계수값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Misra et al., 2010).

1층 자료(개인 수준)의 독립변수로는 여성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논의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연령과 결혼 여부, 가족 돌봄 특성으로서 14세 미만 자녀 수, 인적 자본 특성으로서 학력, 경제적 특성으로서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개인 수준에서 소득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사용한다. 연령은 만 연령을 그대로 사용하고 14세 미만 자녀수도 그대로 사용하며,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가구소득 대비 다른 가구원의 소득 비율로 사용한다. 결혼 여부는 동거와 결혼을 포함하여 결혼 1, 비혼 0의 더미 변수로 활용한다. LIS 자료에서 학력은 고졸 이하/고졸/대졸

연구의 분석자료인 LIS 데이터에서 직업지위, 근로시간이 결측치인 국가가 많아 부득이하게 직업 또는 근로시간 특성은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서열변수로 되어 있다. LIS 자료에는 숙련도를 나타내는 근로 경험(work experience) 자료가 결측치가 많아 사용하지 못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을 노동시장 숙련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도 한다(Misra et al., 2010). 돌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연령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을 우려하여 제외하였다.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시간 변수 역시 자료 결측치가 많아 포함시킬 수 없었다.

2층 자료(국가 수준)의 독립변수로는 0~2세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근로시간을 사용하였다. 0~2세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보육서비스 정책의 대리 변수이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은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되는 휴직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의 관대함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이다. 파트타임 근로비율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의 유연근로시간제와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시간정책을 나타내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정책 변수로 채택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해 보면, 먼저 보육정책의 경우 국가별 보육인프라 수준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국가별 보육인프라 수준이 다양한 것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점, 성별 노동 분업 혹은 양육에 관한 해당 사회의 문화적 태도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홍승아 외, 2008).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과 연령에 따라 실질적인 일-가족양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와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어 왔다(Gornick et al., 1997; 김수정, 2002; 김은지, 2003).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어머니 고용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아동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보육서비스를 포착하는 변수는 흔히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사용한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보육정책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휴가정책의 경우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 육아휴직(parental leave)으로 구분되고, 국가에 따라 자녀가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휴가(childcare leave)도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으며 제도의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출산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은 국가별 내용의 편차가 매우 크다. 육아휴직 실시 여부, 육아휴직의 유급/무급 여부, 육아휴직 사용 자격, 육아휴직 이용률, 급여방식(소득비례 급여 vs 정액 급여)과 급여의 소득대체 수준, 최대 급여기간, 적용되는 아동의 연령, 휴가의 유연성(파트타임 사용 가능성 및 분할 사용 가능성),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규정(아버지 할당제 실시 등)³⁾ 등의 내용 차이가 상당히 존재한다(홍승아 외, 2008: 34).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요소를 국가 변수로 투입시키기에는 각 요소별 변량이 크지 않아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변량도 크고 비교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며 OECD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육아휴직 특성 변수인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Parental leave FTE paid)을 휴가정책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변수는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곱해서 재생산한 변수로서, 육아휴직기간과 급여 수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변수이다.

세 번째로,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노동시간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탄력적 노동시간제도 또는 유연근로시간제도(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로서, 일하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파트타임 고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홍승아 외, 2009:30).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 자료로 분석 가능한 파트타임근로비율을 활용한다. 노동시간정책의 또 다른 축은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다. 전사회적으로 유급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여성 고용기회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남녀 모두 돌봄 참여와 같은 무급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홍승아 외, 2009:30), 일가족양립을 위한 노동시간정책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OECD 연간 근로시간 데이터를 52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다층모형 분석의 확률 계수 모형에서는 이상의 국가 수준 정책 변수와 14세 미만 자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변수가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지 분석할 것이다.

³⁾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기간, 실제 이용기간 등은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의 제도화와 실제 이용기간 등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추후 심층적 분석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여성 취업 및 근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 분석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값 설명	자료원
종속변수	로그 근로소득	25~45세 취업 여성의 표준화된(PPP, \$) 연간 근로소득	일-가족양립
개인 수준 독립변수	연령	연령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노동시장 숙련도)
	결혼여부	비혼=0, 결혼·동거=1	인구학적 특성
	14세 미만 자녀 수	14세 미만 자녀 수	가족 돌봄
	학력	저=1, 중=2, 고=3*	인적자본
	다른 가구원의 소득	다른 가구원의 소득 / 가구소득	경제적 특성
국가 수준 독립변수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0~2세 아동 중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백분율	일-가족양립정책 특성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아동 중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백분율	
	실질육아휴직 급여기간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급여평균소득대체율	
	파트타임근로비율	전체근로자 중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종속변수 측정 연도 이전 5개년도 평균	
	평균주간근로시간	OECD 근로자 평균 연간근로시간/52주; 종속변수 측정 연도 이전 5개년도 평균	
상호작용항	각 정책 변수 * 14세 미만 자녀수	일-가족양립정책의 간접적 효과	

* LIS는 각국의 소득조사자료에서 학력을 UNESCO, ISCED97의 국제 기준에 따라 고졸 미만/고졸/대졸 이상의 3가지로 구분하여 표준화하였다.

2. 분석자료

다층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1층 분석을 위한 미시자료와 2층 분석을 위한 조직(국가) 자료가 동시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다층모형은 조직 단위인 2층 분석 단위 국가이므로 다양한 국가들의 가족, 소득 사항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개인 자료가 필요하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 Wave VI를 사용할 것이다. LIS는 37개 국가들로부터 각국의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 가구별 소득자료를 집적한 것이다. LIS는 각 나라별 자료의 여러 중요 개념 및 변수의 상이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념과 정의의 표준화를 통해 각국 자료의 변수들을 최대한 비교 가능하도록 일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LIS는 현재까지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한 가장 신뢰성 있는 연구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단위의 집합적 자료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간 비교연구 자료와는 달리 LIS는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이용우, 2006:112).

LIS 데이터베이스는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며, 2012년 현재 분석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4년 전후의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는 LIS에 수록된 37개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2004년), 덴마크(2004년), 핀란드(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4년), 그리스(2004년), 룩셈부르크(2004년), 아일랜드(2004년), 이탈리아(2004년), 한국(2006년), 네덜란드(2004년), 노르웨이(2004년), 스페인(2004년), 스웨덴(2005년), 영국(2004년), 미국(2004년) 등 16개 국가의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LIS 37개국 자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에 따라 변수별로 데이터 결측치가 많아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2층 분석에서 국가 일-가족 양립정책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층 자료분석에서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 자료가 필요하다. 가구 분석 단위 자료를 2004년 전후로 하기 때문에 정책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 2004년 이전의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가족양립정책이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이 많지 않았다. 이는 일국 차원의 분석일 경우 정책의 변량이 크지 않아 개인의 정책 수급 내용의 영향을 알 수 없었던 데에서도 기인하지만,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자체가 여성의 근로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가족으로 인한 고용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간 정책 차이에 따라 일-가족 양립 가능성이 달라지는지 즉 가족 돌봄 부담이 임금근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다층 모델을 적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가족-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 모델(Multi-level model)의 확률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확률 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LI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STATA 명령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모델 분석이란, 내재적 자료(nested data) 또는 위계적 자료(hierarchical data)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에 속한 개인의 자료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된다. 다층모델 분석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조직 수준의 특징이 하나의 변수로 포함되어 조직 특성의 영향을 따로 분석하였지만, 개인의 특성조차도 개인이 속한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층모델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의 특성들이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연령, 학력, 근속년수, 기업 규모 등- 이 있다고 할 때 연령, 학력, 근속년수 등은 개인의 특성이고 기업 규모는 조직의 특성이다. 사실상 기업 특성에 따라 연령, 학력, 근속년수 등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단층모델 분석에서는 연령, 학력, 근속년수, 기업규모를 한 차원에서 분석한다. 반면 다층모델 분석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조직의 특성에 따른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국가간 비교연구도 다층자료의 한 예이다. 여러 국가에 소속된 개인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각 국가에 개인들이 속하는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얻게 된다. 동일 국가 내 개인들의 행동은 국가의 문화, 행정제도, 경제수준 등의 여러 가지 공통점을 공유함

으로써 상호 상관성이 존재하나 국가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독립적(국가별 특성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침)이라 할 수 있다(강상진, 1997). 즉 일-가족양립정책에서 여성의 일 또는 가족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개인의 특성, 가구 특성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족양립정책이 발달되어 있으면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이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요인을 완화시키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본래적 기능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분석모델과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개인 수준 모형〉

$$Y_{ij} = \beta_{0j} + \sum \beta_{1jk} X_{jk} + \varepsilon_{i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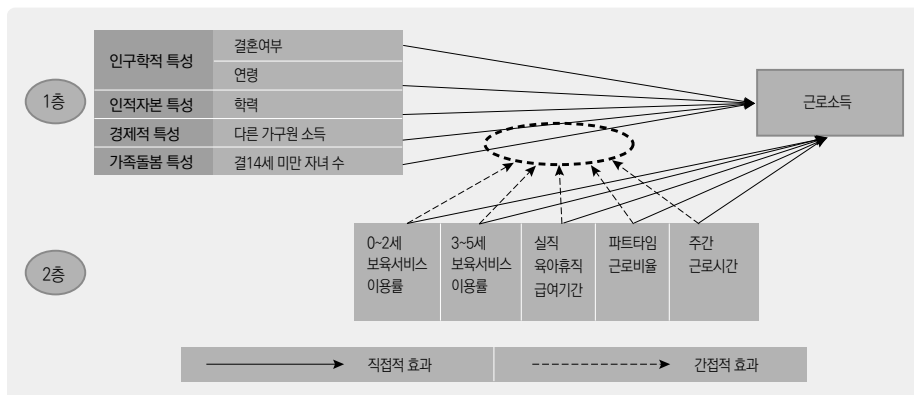
Y_{ij} : 여성 근로소득 β_{0j} : 여성 근로소득의 각국 모평균 X_{jk} : 개인 수준 설명변수,
 β_{0j} : 각국의 여성 근로소득 평균 β_{1jk} : 계수 ε_{ij} : 오차항

〈국가 수준 모형〉

$$\begin{aligned} \beta_{0j} &= \Upsilon_{00} + \sum \Upsilon_{01} Z_j + \delta_{0j} \\ \beta_{1j1} &= \Upsilon_{101} + \sum \Upsilon_{11k} Z_j + \delta_{1j1} \\ &: \quad : \quad : \\ \beta_{1jk} &= \Upsilon_{10k} + \sum \Upsilon_{11k} Z_j + \delta_{1jk} \end{aligned}$$

Υ_{00} : 절편의 상수항 $\Upsilon_{101} \sim \Upsilon_{10k}$: k개 개인변수 기울기의 상수항 Z_j : 국가 수준 설명변수 $\delta_{0j}, \delta_{1j1} \sim \delta_{1jk}$: 오차항

그림 1. 일-가족양립정책이 일-가족양립에 미치는 영향 다층모델 분석틀



IV. 분석결과

1. 국가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일-가족양립정책이 일-가족양립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가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대략적 양상을 분석한다. <표 2>에 나타난 분석 변수의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석의 종속변수인 25-45세 여성 취업자의 연간 근로소득 평균은 \$25697.1이며, 평균 연간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34654.4,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로 \$13020.91이다. 한국의 평균 근로소득은 \$19542.88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한국의 자료는 2006년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35.65세로,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결혼지위는 0.6146으로 결혼 또는 동거를 하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크다. 분석 대상 중 핀란드(0.49), 노르웨이(0.47), 스웨덴(0.44)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혼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다. 분석 대상의 평균 14세 미만 자녀 수는 0.86명으로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평균 14세 미만 자녀 수가 더 많다.

분석 대상의 평균 교육수준은 2.27점으로 분석대상의 전체 평균 학력 수준은 고졸 이상이다. 핀란드(2.43), 노르웨이(2.39), 스웨덴(2.34)의 평균 학력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높았고, 오스트리아(2.08), 이탈리아(1.9), 룩셈부르크(1.99)의 평균 학력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낮았다. 전체 분석 대상의 다른 가구원 소득 비율 평균값은 0.55 정도로 국가별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핀란드(0.48)가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값이 조금 낮았고, 이탈리아(0.63)는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값이 조금 높았다.

일-가족양립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평균값은 25.05% 수준으로, 덴마크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61.7%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43.7%), 스웨덴(3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6.3%), 그리스(7%), 독일(9%)의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분석 대상 16개 국가의 평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점수는 14.155였고, 이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프랑스로 각각 42, 40.8, 40.2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법정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되지 않아 0의 수치를 나타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운영을 대리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은 네덜란드가 32.8%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23.05%)과 노르웨이(20.51%)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그리스가 5.85%로 가장 낮았고, 스페인과 한국도 7%대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33.03시간인데, 한국은 46.6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도 40.8시간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는 27.33시간, 노르웨이 27.58시간으로 한국, 그리스와는 무려 13~19시간 가량 차이가 났다.

표 2. 분석 변수의 국가별 기술 통계: 평균(표준편차)

국가 (연도)	연간소득 (\$)_PPP	연령	결혼 지위	14세 미만 재취수	교육 수준	다른가구 원소득 비율	0~2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 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파트타임 근로비율 (%)	주간근 로시간 (시간)
at(04)	24193.91 (15749.68)	35.75 (5.87)	0.63 (0.48)	0.76 (0.89)	2.08 (0.61)	0.57 (0.28)	6.6	74.0	21.84	12.78	33.14
de(04)	22738.86 (17303.53)	36.04 (6.05)	0.51 (0.50)	0.62 (0.83)	2.18 (0.59)	0.55 (0.31)	9	80.3	11.4	18.27	28.05
dk(04)	30132.51 (15417.59)	35.61 (5.85)	0.59 (0.49)	1.15 (1.01)	2.22 (0.69)	0.55 (0.21)	61.7	89.7	28.8	15.56	30.36
es(04)	16056.2 (9854.10)	34.55 (5.96)	0.59 (0.49)	0.63 (0.82)	2.16 (0.85)	0.57 (0.23)	20.7	98.6	0	7.74	33.28
fi(04)	26564.51 (12272.77)	36.22 (6.05)	0.49 (0.50)	0.89 (1.04)	2.43 (0.64)	0.48 (0.25)	35	46.1	15.6	10.62	33.43
fr(05)	17717.49 (10383.36)	35.72 (5.83)	0.57 (0.50)	1.02 (0.95)	2.19 (0.72)	0.55 (0.24)	28	101.9	40.2	13.61	29.02
gr(04)	13020.91 (8528.47)	34.97 (5.91)	0.68 (0.47)	0.77 (0.86)	2.14 (0.75)	0.57 (0.23)	7	46.8	0	5.85	40.80
ie(04)	26284.55 (19786.7)	34.94 (6.06)	0.55 (0.50)	0.90 (1.00)	2.25 (0.76)	0.59 (0.23)	15	68.2	0	18.24	32.79
it(04)	17134.79 (11942.35)	36.24 (5.77)	0.58 (0.49)	0.59 (0.80)	1.90 (0.69)	0.63 (0.20)	6.3	100.3	3.6	11.91	35.53
kr(06)	19542.88 (14958.67)	36.01 (6.17)	0.67 (0.47)	0.84 (0.92)	2.19 (0.64)	0.58 (0.27)	19.5	60.9	6.12	7.99	46.65
lu(04)	34654.41 (25063.1)	35.42 (5.68)	0.60 (0.49)	0.82 (0.92)	1.99 (0.81)	0.55 (0.28)	14	72.3	16.12	12.73	32.10
nl(04)	25337.62 (16721.79)	35.28 (5.89)	0.59 (0.49)	1.02 (1.06)	2.23 (0.72)	0.57 (0.27)	29.5	70.2	0	32.80	27.33
no(04)	27688.62 (14654.24)	35.45 (5.77)	0.47 (0.50)	1.10 (1.02)	2.39 (0.57)	0.55 (0.26)	43.7	85.6	42	20.51	27.58
se(05)	23219.57 (12893.88)	35.79 (5.83)	0.44 (0.50)	1.09 (1.01)	2.34 (0.60)	0.55 (0.26)	39.5	86.6	40.8	14.05	30.79

표 2. 계속

국가 (연도)	연간소득 (\$)_PPP	연령	결혼 지위	14세 미만 자녀수	교육 수준	다른가구 원소득 비율	0~2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	3~5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	실질육아 휴직급여 육아 휴직기간	파트타임 근로비율 (%)	주간근 로시간 (시간)
uk(04)	27490.69 (22325.8)	35.58 (5.89)	0.57 (0.50)	0.81 (0.94)	2.16 (0.63)	0.58 (0.26)	25.8	80.5	0	23.05	32.61
us(04)	31803.89 (26305.17)	35.62 (6.09)	0.67 (0.47)	0.98 (1.08)	2.10 (0.62)	0.52 (0.28)	35.5	62.0	0	12.99	35.03
평균 (표준 편차)	25697.1 (21690.35)	35.65 (6.05)	0.6146 (0.4867)	0.8622 (0.9886)	2.2686 (0.6723)	0.5500 (0.2675)	25.05	76.18	14.155	14.92	33.03

at:오스트리아/de:독일/dk:덴마크/es:스페인/fi:핀란드/fr:프랑스/gr:그리스/ie:아일랜드/it:이탈리아/kr:한국/lu:룩셈부르크/nl:네덜란드/no:노르웨이/se:스웨덴/uk:영국/us:미국

분석에 투입된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먼저, 개인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변수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종속변수인 로그 연간근로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안할수록, 14세 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가구원 소득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른 가구원 소득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할수록, 14세 미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상관관계 결과만 놓고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성 근로자 본인 소득, 다른 가구원 소득과 다른 요인들의 관계가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주간근로시간과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 근로비율,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주간근로시간이 길수록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 근로비율은 낮아지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도 낮다. 일부 정책변수간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층모형 분석에서는 정책 변수를 하나씩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log여성근로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은 정책변수는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유일하였다.

표 3. 개인변수와 국가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변수명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1	2	3	4	5	6
개인수준(level 1), n=78727									
1. 연령	35.6470 (6.0517)	25	45	1.000					
2. 결혼여부	0.6146 (0.4867)	0	1	0.202 **	1.000				
3. 14세미만 자녀수	0.8622 (0.9886)	0	9	0.002	0.291 **	1.000			
4. 학력	2.2686 (0.6723)	1	3	-0.111 **	0.005	-0.027 **	1.000		
5. 다른 가구원 소득 비율	0.5500 (0.2675)	0	0.9999	0.019 **	0.435 *	0.248 **	-0.132 **	1.000	
6. log 연간근로소득	9.8300 (0.9474)	-0.5538	14.2909	0.044 **	-0.038 **	-0.132 **	0.299 **	-0.511 **	1.000
국가수준(level 2), n= 16									
1.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25.0471 (15.2088)	6.3	61.7	1.000					
2.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76.1765 (16.7635)	46.1	101.9	0.144	1.000				
3. 실질육아휴직급여 휴직기간	14.155 (15.98)	12	156	0.504 *	0.391	1.000			
4. 파트타임근로비율(%)	14.92 (6.66)	144	24336	0.256	0.139	0.001	1.000		
5. 주간근로시간	33.03 (4.99)	0	100	-0.357	-0.469 +	-0.443 +	-0.654 **	1.000	
6. log 연간근로소득	9.7803	9.2745	10.1749	0.610 *	-0.026	0.382	0.301	-0.403	1.000

+ p<.1, * p<.05 **p<.01

2. 다층모델 분석

가. 국가간 변량 차이(null model)

먼저, 변량의 국가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즉 다층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무 독립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기초 모형을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국가 수준의 표준편차가 0.2453으로, 개인 수준 변량과 국가 수준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를 설명할 때 국가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국가에 따라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이 차이가 있으며 다층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표 4. 여성 근로소득의 국가간 변량 차이 검증

고정효과(fixed effect)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절편	9.8169**	0.0617	[9.696046	9.937776]
확률효과(random effect)				
절편 표준편차	0.2453**	0.0359	[0.1841	0.3268]
간차 표준편차	0.8172**	0.0360	[0.7496	0.8909]

+ p<.1, * p<.05 **p<.01

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층분석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 요소를 하나씩 투입해 본 결과는 <표 5>의 확률 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 분석인 모델1-1, 2-1, 3-1, 4-1, 5-1에서 보이는 바와 같고, 간접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과 돌봄 부담(14세 미만 자녀 수)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 확률 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 분석 결과는 모델 1-2, 2-2, 3-2, 4-2, 5-2와 같다.

먼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투입된 모든 변수들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연간 근로소득은 0.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혼한 경우 근로소득이 2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대상 연령을 25~45세로 한정하여 연령과 소득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분석 대상 국가들이 대체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선진국들이라 보니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이 한 수준 높아짐에 따라 근로소득은 27.7%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과 근로소득의 선형 관계가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다른 가구원의 소득 비율이 1%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은 1.7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가구내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여전히 동등한 생계부양자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녀 돌봄 부담을 나타내는 14세 미만 자녀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은 4.4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5~45세 여성에게 자녀 돌봄 부담은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변수인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1%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은 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족양립 정책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1-2의 확률계수모형 분석에서는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14세 미만 자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0~2세 보육서비스가 14세 미만 자녀수가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14세 미만 자녀수의 상호작용항이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계수의 값이 양(+)으로 나타나,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을수록 14세 미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 근로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완화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3~5세 보육서비스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모델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수준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모델 1-1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2-2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자녀 양육과 근로소득의 부적 관계를 완화시키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3~5세 보육서비스 정책은 일가족양립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Gornick et al., 1997; 김수정, 2002; 김은지, 2003), 0~2세 보육서비스는 어머니 고용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3~5세 보육서비스(특히 중부 유럽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종일 보육보다는 반일제로 운영한다든지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수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교육시설도 있을 정도로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성격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을 정책 변수로 투입한 모델 3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수준 변수들의 영향은 모델 1, 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는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곱하여 만든 변수라서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력단절로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질 좋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Rhum, 1998; Rønsen, 1999; Neyer, 2003; Pettit & Hook, 2005; 김진욱, 2008; 김정호, 2012)에서 나타난 관대한 육아휴직이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단절 완화에 직접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4세 미만 자녀 수와 실질육아휴직급여휴직기간의 상호작용항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1$)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점수가 높을수록 14세 미만 자녀가 많은 여성의 근로소득은 높아진다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즉, 육아휴직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적정한 육아휴직은 25~45세 여성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일정 정도의 육아휴직급여가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자녀 돌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 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은 다른 모델과 다르지 않고, 파트타임근로비율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5$)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근로비율이 1% 높아지면 여성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9% 정도 증가하여, 파트타임 근로가 자녀 양육기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단절과 근로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4세 미만 자녀수와 파트타임 근로비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는 않지만($p < .10$), 14세 미만 자녀수가 근로소득 감소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파트타임 근로와 같은 노동시간 제도가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로소득 감소 영향을 완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logged earning)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다층 분석

변수명\모델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1-1	모델 1-2	모델 2-1	모델 2-2	모델 3-1	모델 3-2	모델 4-1	모델 4-2	모델 5-1	모델 5-2
고정효과(fixed effect)										
상수항	9.5576 **	9.6059 **	9.6545 **	9.6046 **	9.6807 **	9.7006 **	9.4619 **	9.4042 **	10.5765 **	10.6544 **
연령	0.0089 **	0.0089 **	0.0089 **	0.0090 **	0.0089 **	0.0090 **	0.0089 **	0.0090 **	0.0089 *	0.0090 **
결혼여부	0.2947 **	0.2944 **	0.2945 **	0.2937 **	0.2947 **	0.2940 **	0.2946 **	0.2933 **	0.2948 **	0.2938 **
14세 미만 자녀수	-0.0447 **	-0.1065 **	-0.0430 **	0.0228	-0.0446 **	-0.0737	-0.0445 **	0.0147 *	-0.0446 **	-0.1661 *
학력	0.2771 **	0.2746 **	0.2774 **	0.2748 **	0.2773 **	0.2747 **	0.2773 **	0.2747 **	0.2773 **	0.2747 **
다른 가주원 소득	-1.7661 **	-1.7592 **	-1.7664 **	-1.7588 **	-1.7663 **	-1.7599 **	-1.7665 **	-1.7578 **	-1.7665 **	-1.7581 **
0-2세 보육서비스	0.0073 *	0.0052 +								
3-5세 보육서비스			0.0011	0.0017						
실질유아휴직급여휴직기간					0.0040	0.0023				
파트타임근로비율							0.0185 *	0.2194 *		
평균주당근로시간									-0.0254 **	-0.0279 **
정책 * 14세미만 자녀수		0.0023 **		-0.0009		0.0018 **		-0.0041 +		0.0036
확률효과(random effect)										
무작위 계수		0.0527		0.0625		0.0572		0.0589		0.0624
무작위 절편	0.2101	0.2237	0.2367	0.2379	0.2290	0.2357	0.2053	0.1951	0.2034	0.1994
잔차	0.6608	0.6580	0.6608	0.6580	0.6608	0.6580	0.6608	0.6580	0.6608	0.6580
모델 설명력										
Log pseudolikelihood	-15758.059	-15707.788	-15759.948	-15710.847	-15759.426	-15709.622	-15757.693	-15706.785	-15757.541	-15709.201
사레수	78727	78727	78727	78727	78727	78727	78727	78727	78727	78727
wald chi(2)	1858.91**	2422.76**	2413.65**	2475.55**	1868.65**	1676.35**	1911.72**	1682.07**	1921.71**	1778.17**

+ p<.1, * p<.05 **p<.01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노동시간 감축의 일가족양립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주간 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모델 5와 같다. 개인 수준의 변수들은 다른 모델에서의 영향력과 비슷하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1$)이다. 노동시간이 1시간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은 2.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노동시간과 여성의 근로소득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단지 국가별로 노동시간, 연차휴가, 파트타임 근로 등 가족친화적 노동시간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기술하는 연구가 많았다(OECD, 2007; 황수경 외, 2008). 돌봄 부담이 큰 여성이 노동시간이 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간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가족친화적인 직장이라 할 수 있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근로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가정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자녀 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주는 간접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한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가구원 소득 비율이 낮을수록, 14세 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아진다. 이는 기존의 여성 근로소득 결정요인 연구 결과가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다. 둘째, 일가족양립정책 중 보육서비스는 여성 근로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에 한정된다. 3~5세 보육서비스는 일가족양립정책으로서 여성 근로소득에는 직접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수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조절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파트타임 근로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의 유연한 운영이 여성의 취업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근로소득을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조절효과가 파트타임 근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간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근로시간이 긴 노동시장은 돌봄 부담이 큰 여성이 참여하기에는 시간 압박이 커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위축되며,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다섯째, 직접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과 13세 미만 자녀수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자체가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약할지라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함의

일-가족양립정책은 돌봄 부담이 있는 근로자가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아동빈곤율 증가, 출산율 감소, 노동시장 유연화 등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연구는 국가별 여성 고용률, 성별임금비율 비교하거나 또는 국가 분석 단위 실증 분석에 그치고, 개인 분석 단위 연구에서는 일개 정책의 급여 수급 효과 분석 정도에 그쳤다. 개인의 일-가족양립가능성과 정책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 단위, 국가 단위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층적·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도 정책의 직접 효과만 분석했을 뿐 정책의 간접효과(돌봄 부담이 근로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가족양립정책의 보다 정확한 효과를 분석해 내고자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다층적 자료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 요소들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노동시간 단축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3~5세 보육서비스 이

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파트타임근로비율은 여성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으나, 14세 미만 자녀 수가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완화시키지는 못해 일가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성을 규명하여 국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정책 도입 또는 확대에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61.8%에 못 미치는 54.9%를 기록하고 있으며(OECD, 2012), 선진국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M-curve 현상도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 지속 현상에 더하여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위협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가족 양립이 강조되는 시기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그러할 전망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일가족양립정책이 제정·확대되었으나 예산제약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정보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가족양립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해 온 복지국가들의 일가족양립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여성 근로소득에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근거로 일하는 어머니들이 0~2세 보육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영아 어린이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3~2004년(한국은 2006년) 자료로서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의해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008년 OECD 기준으로 37.8%까지 증가했다. 최근에는 무상보육서비스 정책으로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0~2세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의 일가족양립지원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지 않고 부모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여성 근로소득에 효과가 없었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가 부모의 취업 또는 근로와 관계없이 이용될 때에는 일가족양립 효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공급 또는 보육료 지원 설계시 일가족양립을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취업부

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영아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의 기능적 등가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이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급여가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이 보다 길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0%(급여 상한선 135만원)이다. 그나마 휴직 후 고용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귀후에 지급된다. 다른 국가들의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은 적절한 수준이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할 때 급여 소득대체율을 급격히 올릴 수는 없겠으나, 육아휴직급여의 일정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

넷째,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유연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노동시간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파트타임근로비율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완전히 포착하는 변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파트타임 근로의 성격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은 일가족양립을 위해 의미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 매우 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돌봄 부담 때문에 시간 압박이 큰 취업모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크고, 퇴출의 유인을 제공한다.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가족양립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의 정책적 함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일 또는 가족 돌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으로 인한 근로 부담을 완화시키는’ 일-가족양립정책의 간접적 영향을 바로 포착할 수 있는 다층모델 분석을 이용하여 일-가족 갈등이 국가의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분석하였고, 일-가족양립정책의 간접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사실상 일-가족양립정책은 여타 노동시장정책과는 달리 고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가족양립정책 효과 연구가 정책의 직접적 영향 분석에 치중하여 일-가족 갈등 완화라는 본질적 역할에 대한 분석은 간과하여 왔다.

이 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본래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방법인 다층모델 분석 절편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의 직간접적 효과를 모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개인-조직의 2층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다층모델(Multi-level model)을 국가간 비교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국가간 비교 연구 분석 방법론의 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층모델 분석이 지금까지 주로 학교, 기업 조직에 적용되어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다층 모델 분석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이는 다층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개인 분석 단위의 표준화된 국가간 비교 자료가 그동안 많이 축적되지 않았던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ISSP, ECHP, ELFS, MTUS 등 점차 개인 분석단위의 국가간 비교 연구가 가능한 자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다층 모델을 적용한 비교 연구 기반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류연규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정책, 돌봄서비스, 비교연구이며, 현재 성역할태도와 복지레짐의 관계, 다중격차와 복지정치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yqryu@stu.ac.kr)

백승호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복지국가전략, 노동시장, 빈곤이며, 현재 '서비스경제와 임금불평등'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livevil@catholic.ac.kr)

참고문헌

- 강상진(1997). 다층자료(Multi-level Data) 분석방법: 2-Level Model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평가학회 통계자료분석 workshop(1997년 8월 20~22일) 자료집.
- 김사현(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pp.113-137.
- 김수정(2002). 복지국가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김수정(2007). 여성가주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7(1), pp.93-133.
- 김영미(2007). 복지국가와 여성 노동권: 제도적 지원과 보장수준의 관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영미(2009a). 복지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 개혁과 여성 사회권: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3), pp.1-27.
- 김영미(2009b). 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4), pp.281-305.
- 김은지(2003). 어머니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고용지원효과와 그 재분배적 성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은지(2008). 남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은하(2009). 여성의 빈곤지위 변동을 설명하는 페미니즘의 유효성 탐색: 인적자본론과 선호 가설의 약점 보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정호(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 34(1), pp.169-197.
- 김진옥(2008).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3, pp.239-260.
-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류연규(2009).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 76(1), pp.5-42.
- 민현주(2008). 엄마노릇하기와 성별 일자리 분화가 여성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여성경제연구*, 5(1), pp.75-91.

- 박현순·나동석(2009). 한부모여성과 기혼여성의 취업관련요인 비교연구: 고정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4), pp.263-290.
- 백학영(2007).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여지영(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우석진(2008). 출산제고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14(3), pp.55-104.
- 유해미(2004). 젠더 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 시기의 양육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윤홍식(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pp.291-319.
- 윤홍식(2006) 부모·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pp.223-249.
- 이병희, 정재호(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pp.129-150.
- 이영자(2004).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성의 변화. *한국여성학*, 20(3), pp.99-138.
- 이용우(2006).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아동의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2(2), pp.105-131.
- 장수정, 송다영, 김은지(2009). 일가족 양립 정도에 대한 인식: 집단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pp.349-370.
- 장지연, 최은영, 이정우, 김지경(2005). 일-가족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홍승아, 류연규, 김영미, 최숙희, 김현숙, 송다영(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 이미화, 김연란, 유계숙, 이영미, 이연정, 이채정(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수경, 김훈, 김인순, 성지미, 유계숙(2008).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Adséra, A. (2004).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 pp.17-43.
- Becker, G. S. (1985).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pp.S33-S58.
- Bittman, M. (1999). Parenthood without penalty: Time use and public Policy in Australia and Finland. *Feminist Economics*, 5(3), pp.27-42.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pp.209-227.
- Crompton, R. (1995). Women's Employment and the "Middle Class", in T. Butler and M. Savage. (eds.) *Social Change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UCL Press.
- Del Boca, D. (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pp.549-573.
- Edin, P. A., Gustavsson, M. (2001). *Time out of work and skill depreciation*. mimeo. Uppsala University.
- Esping-Andersen, G. (2002). A new gender contract. In G. Esping-Andersen, G. Duncan, A. Hemerijck and J. Myles(ed),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Estévez-Abe, M., Hethy, T. (2008). *How Policies Affect Women's Economic Position within the Famil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Wives'Contribution to Household Income*. LIS Working Paper, No. 505.
- Gelbah, J. B. (2002).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pp.307-322.
- Gornick, J. C., Meyers, M. K., Ross, K. E. (1997). Public Policies and the Employment of Mothers: A Cross-National Study. *LIS Working Paper*, No. 140.
- Gornick, J. C., Meyers, M K.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The Russell Sage Foundation.
- Gustaffson, S., F. Stafford(1992). Childcare subsidies and labor supply in Swed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1), pp.204-230.

- Gustafsson, S. (1995). Public policies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Swede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in T. P. Schultz(Eds.), *Investment in Women's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nau, J., Meulders, D., O'Dorchai, S. (2010). Maybe Baby: Comparing Partnered Women's Employment and Child Policies in the EU15. *Feminist Economics*, 16(1), pp.43-77.
- Jaumatt, F. (2003).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37, pp.51-108.
- Joesch, J. M.(1994). Children and the Timing of Women's Paid Work after Childbirth: A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pp. 429-440.
- Korpi, W.(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7, pp.127-191.
- Lippe, T. van der, Jager, A., Kops, Y. (2006). Combination pressure: The paid work-family balance of men and women in European countries. *Acta Sociologica*, 49(3), pp. 303 - 319.
- Lewis, J., Campbell, M. (2007). Work/Family Balance Policies in the UK since 1997: A New Departure?. *Journal of Social Policy*, 36(3), pp.365-381.
- Lewis, J., Knijin, T., Martin, C., Ostner, I. (2008). Patterns of Development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or Parents in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K in the 2000s. *Social Politics*, 15(3), pp.261-286.
- Mandel, H. (2009). Configurations of Gender Inequality: the Consequences of Ideology and Public Poli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0(4), pp. 693-719.
- Mandel, H., Semyonov, M. (2005). Family Policies and Gender Ga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 pp.689-710.
- Mason, K. O., Khulthau, K. (1992). The perceived impact of child care costs on women's labor supply and fertility. *Demography*, 29, pp.523-544.
- McGinnity, F., McManus, P. (2007). Paying the price for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omparing the wage penalty for women's part-time work in Britain,

-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9(2), pp.115-134.
- Meyers, M. K., Gornick, J., Ross, K. E. (1999). Public childcar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In D. Sainsbury(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Misra, J., Budig, M., Böckmann, I. (2010). Work-Family Policies and the Effects of Children on Women's Employment and Earnings. *LIS Working Paper*, No. 534.
- Neyer, G. (2003). Family Policies and Low Fertility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1*, pp.46-93.
- OECD (2002).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OECD.
- OECD (2003).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2: Austria, Ireland and Japan*. OECD.
- OECD (2004).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3: New Zealand, Portugal, Switzerland*. OECD.
- OECD (2007).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 OECD (2012). *Employment Outlook*. OECD. <http://www.oecd.org/els/employment/policiesanddata/oecdemploymentoutlook.htm>
- Pettit, B., Hook, J. (2005). The Structure of Women's Employ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tics*, 84(3), pp.779-801.
- Rønsen, M. (1999). *Assessing the impact of parental leave: Effects o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in P. Moss & F. Deven.(Eds.)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Research and Policy Issues in Europe*. NIDI/CBGS Publications. pp.193-225.
- Ruhm C. (1998).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1), pp.85-317.
- Stier, H., Lewin-Epstein, N., Braun, M. (2012). Work-family conflict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role of social policie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0(3), pp.265-279.
- Talyor-Gooby, P.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Weber, B. A., Jensen, L., Miller, K., Mosley, J., Fisher, M. (2005). A critical review of rural poverty literature: is there truly a rural effect?.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8(4). pp.381-414.

How do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Women's Labor Income

Ryu, Yunkyu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ack, Seoung 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Keywords: Work-family Balance Policy, Women's Labor Income, Multi-level Model, Direct and Indirect Effect, Comparative Study